

### ■ 농지에 축사 진입 수월해질 듯

그동안 농지전용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확인 절차가 앞으로는 폐지된다.

농림부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키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일현의원이 입법 발의한 농지법개정안을 수정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로의 축사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축산도 농업인 만큼 농지에 축사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우선 단계적으로 축사 진입을 완화하면서 농지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농지법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농림부 방침에 대해 축산업계는 휴경직불제까지 주면서 늘리는 논에 축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축산을 확대하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DDA/FTA 등 개방 확대에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축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펼치고 있는 쌀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장들과 축협조합장 등 축산지도자들은 지난 25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면담을 통해 현 제도하에서 농지 심의 폐지는 축사의 농지 진입에 있어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지법개정안대로 처리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강행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판정이 난 소의 나이를 8살 이상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6월5~9일)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 나이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미국 압력에 못이겨 국민 생명을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한 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26일 “수의파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지난 19~23일 미국 현지조사를 벌이고 지난 25일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의 광우병 소가 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조사를 한 장병준 건국대 수의과학연구소장은 “해당 소는 치아 뿌리가 잇몸에서 노출된 정도가 심하고 앞니들의 틈새도 많이 벌어져 있는 등 이빨의 마모가 심했다”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살은 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5월 초 미국의 수출작업장 36곳을 2주 가량 점검한 뒤 승인을 내릴 방침이어서 5월 하순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선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 ■ 예산처, 내년 축발기금 잠정편성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과 관련,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한 반면 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기금 수입을 올리는 여유자금 운용액만 크게 늘리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예산처는 내년도 축발기금 전체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96억8,900만

원 증가한 1조237억7,500만원으로 잠정 편성했다. 하지만 세부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자연순환농업 등 2007년도 신규사업 예산 272억원(농림부 요구액)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기존 사업 가운데서도 사업별로 최고 10%까지 예산을 삭감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용자) 예산의 경우 올해 2,042억5,500만원에서 10% 줄어든 1,838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원유 수급조절, 축산물 수급안정, 송아지 생산안정 농가보전금, 학교 우유급식, 가축공제사업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질병 근절사업, 친환경축사 설치 시범사업 예산도 각각 5%씩 감액 편성했다. 또 축산물 유통 및 가격조사, 종축등록사업 지원, 양봉산업 육성,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예산도 소폭 줄였다.

반면 축발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올해보다 3% 늘렸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유자금 운용액은 올해보다 63.1%나 증액한 3,838억7,500만원이나 편성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조성되는 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 한·미FTA '밀실협상' 전철 났나

각계 저명인사들의 시국선언 등 한·미FTA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미양국이 협상시 대외 비공개로 지정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협상 비난이 높다.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회의에서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웨디 커틀러 미측 대표는 협상의 영문명칭을 'KORUS FTA'로 하고,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 투자 등 17개의 세부 협상분과를 두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시 생산되는 문서중 대외 비공개로 지정해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되, 보안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

개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이면합의로 얼룩진 실패한 쌀협상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밀실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천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사안들이 논의되는 협정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 2015년까지 육류 73% 자급목표 설정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위원장·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오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준을 육류 73%(쇠고기 46%, 돼지고기 81%, 닭고기 90%)로 설정토록 지난 21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식량자급률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2015년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DDA/FTA협상 등 여건 변화를 감안, 5년 단위별로 변경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목표치 설정 유형을 ▲품목 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4가지로 설정할 것과, 쌀·맥류인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54%, 사료용포함 곡물자급률은 29%, 칼로리자급률은 48%로 설정토록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효율적인 달성과 DDA/FTA협상 등 여건변화를 감안, 중앙농정심의 위원회에서 목표치를 점검·평가하되, DDA와 FTA 협상 이후 시장개방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목표치를 수정할 것도 건의했다.

## ■ 유가공 제품 원재료표시 '권란'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과 관련 유가공 제품의 특성상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4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가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표시면이 30cm<sup>2</sup>이하 제품이 상당량인 유제품의 경우 사용된 모든 원재료 함량 표시는 어렵다며 유가공업체의 실무책임자들이 축산물표시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유가공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견수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축산물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에 대해 업계에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역원은 특히 우유대리점에서 가정에 배달되는 과정에서 유제품이 실온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원은 또 위생감시의 주요한 지적사항인 만큼 유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체계)를 위한 생산업체 및 대리점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 ■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 여야의원 공동 결의안 채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를 위해 여야 의원이 함께 나섰다.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을 비롯해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공동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특히 이날 결의안은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여야가 당을 초월

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이날 강기갑의원은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일본과 홍콩 등은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발병우의 나이 확인 후 바로 수입재개에 들어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의원의 뜻을 모아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호경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가와 정부의 노력으로 BSE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미국의 압력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위생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 가축질병 위기대응 통합훈련 개최

농림부는 지난 4월27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가축질병 위기 대응통합훈련을 실시했다.

통합훈련은 농림부 주관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한 8개 부처·청, 5개 지방자치단체 등 19개 기관에서 총 500여명이 참여해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 실시됐다. 도상훈련은 경기 안양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현장훈련은 경기 포천 영종면 양문3리 소재 삼남매 목장에서 이뤄졌다. 훈련내용은 과거 국내에서 직접 손실액만 4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던 구제역 발생 사례를 모델로 한 가상 상황 메시지에 따라 중앙부처간에는 도상 훈련이 실시됐다. 또한 경기도·포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제역 발생농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 감염 가족의 살처분 및 소독 등 현장훈련을 펼쳤다.

농림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중앙과 지방·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가축질병 위기 대응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여 가축질병 위기 대응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방역본부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경영혁신 회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4월 10일 각도본부 사무국장, 지도과장 및 출장소 팀장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구제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농장예찰과 국경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며 “방역요원들은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특별예찰과 교육홍보를 실시해 유사증세 발견시 조기에 신고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본부는 또 지난해 경영평가 분석 및 2006년 경영혁신 추진과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올해의 핵심추진 혁신과제인 △다면평가제 등을 통한 인사관리의 합리화 △윤리경영 시스템 강화 △돼지오제스키병 근절대책 추진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교육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호 본부장은 “경영혁신 추진은 방역본부의 혁신 방향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 및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본부의 고유 업무는 물론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가축공제 가입하면 무료 전기 점검

농협은 4월부터 가축공제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무료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이 서비스

는 공제 가입자의 사후 보장에 앞서 사전에 화재 예방을 통해 농가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1,200농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70%나 증가한 2,042농가가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내년에는 전 가입농가가 축사 전기시설 점검은 물론 불량시설에 대해 무료 개·보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농협의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펼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축사 화재사고가 전년 대비 33.2%나 감소해 올해 가축공제 보험요율을 최대 11%나 인하, 축산농가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지원효과가 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축공제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돼지·말·가금(닭·오리·꿩·메추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하면 돼지와 가금은 손해액(시가)의 95%, 소·말은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 ■ 전국 브루셀라증 인체감염 실태조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올 4월부터 축산업종 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브루셀라증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개 시·군·구 5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및 감염 위험요인 등을 조사해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결과를 농림부에 보내 수의분야와 브루셀라증 공동예방관리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 4월부터 소 브루셀라증이 발생한 전국 50개 시·군·구를 표본 추출해 축산업종 사자, 수의사 등 모두 5000명이 조사를 받는다. 한편 브루셀라증 인체감염은 지난 2002년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는 1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올 4월 현재 37명의 환자가 보고된 상태다. 브루셀라증은 사람간 전파는 되지 않으며 감염된 가축에 접촉한 경우이거나 감염동물의 살균처리 안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감염된다.

〈자료발췌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등〉